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



방송통신위원회

목차

I

방송통신 환경변화 · 1

II

비전 및 정책과제 · 9

신뢰받는 미디어

1.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	12
2. 방송 자원구조 개편	14
3. 디지털 시대 재난방송 대응체계 고도화	16
4. 허위조작정보 및 성범죄물 대응 강화	18

방송통신 성장

5. 미디어산업 활력 제고	21
6. 방송 광고 규제 패러다임 전환	24
7. 공정경쟁 환경 조성	25
8.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법제 마련	27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9. 국민불편 원스톱 해결	28
10.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격차 해소	31
11.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32
12.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및 역량 강화	34

III

코로나19 극복 과제 · 37

IV

추진 일정 · 41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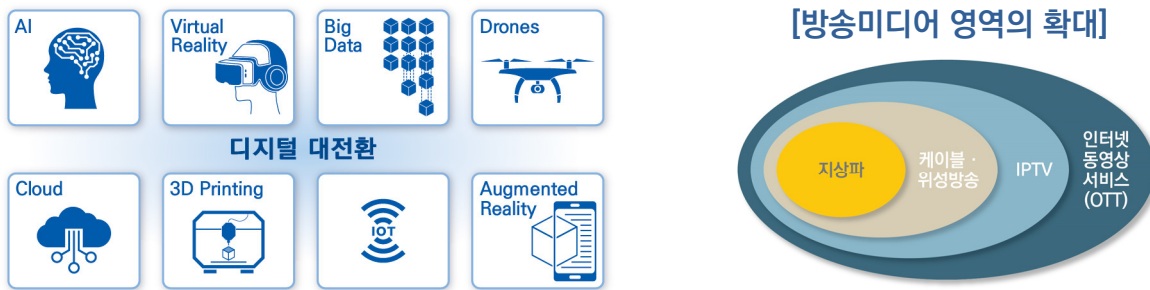


방송통신 환경변화

환경변화 및 대응방향

▣ (디지털 사회) 디지털 대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가속화

- 디지털 기술에 의해 기업의 비즈니스 방식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구조까지 급격히 달라지는 디지털 대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시기 도래
 - 업종·영역 간 경계의 파괴, 업체 간 이합집산이 빠르게 전개되면서 전 산업에 걸친 전방위적 경쟁 가속화



- 이러한 디지털 미래(Digital Future)를 대비하기 위해, 해외 주요국은 방송통신 분야의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음
 - 유럽연합(EU)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AVMS) 지침을 개정하는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을 타깃으로 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MA) 도입 예정
 - 미디어 콘텐츠의 품질 제고,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공간의 확보, 시장 내 참여자 간의 공정경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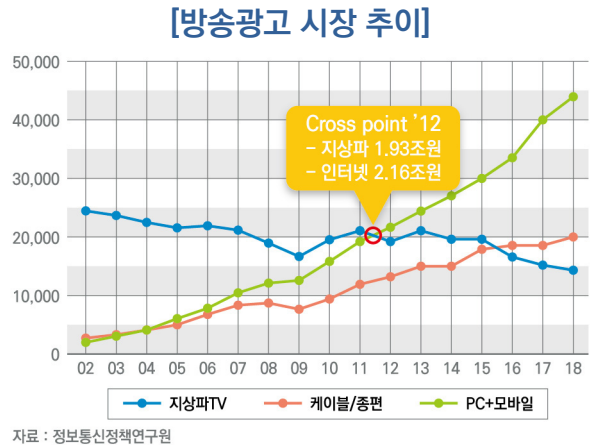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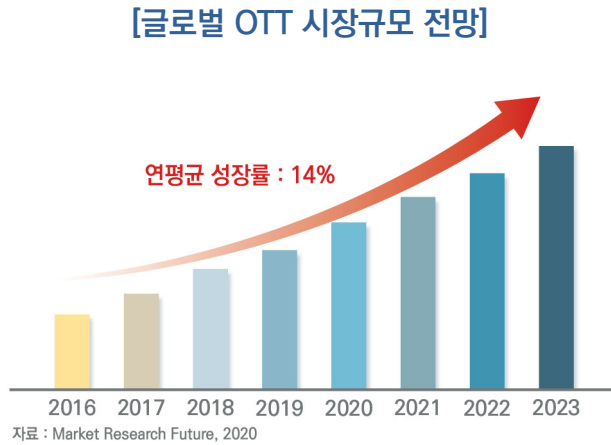
[EU 방송통신 분야 제도 정비 주요내용]

구분	1단계	2단계	비고
전송 계층	규제 프레임워크 지침 ('02년 제정)	전자통신코드(ECC) ('18년 개정)	전자커뮤니케이션서비스 개념 확장
콘텐츠 계층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 ('07년 제정)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 ('18년 개정)	동영상공유 플랫폼(VSP) 포섭
	전자상거래 지침 ('02년 제정)	디지털서비스법(도입 예정) 디지털시장법(도입 예정)	온라인 플랫폼 주요 타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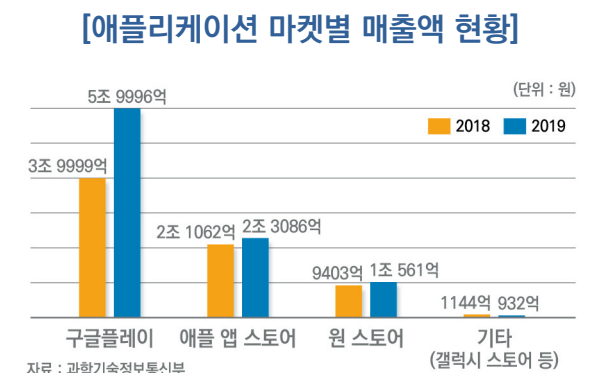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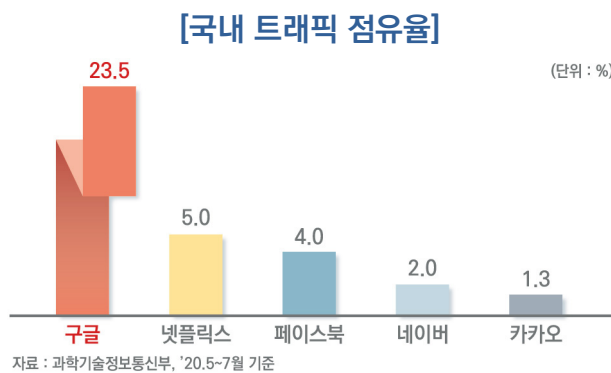
기존의 모든 경계 영역(방송, 통신, 온라인 등)을 아우르는
미래지향적 통합 법체계와 선제적 규범 정립 필요

▣ (미디어경쟁 심화) 레거시 미디어와 신규 진입자 간 경쟁 심화 및 플랫폼의 영향력 증대

- 글로벌 OTT 서비스(유튜브, 넷플릭스 등)가 약진하면서 레거시 미디어(지상파 방송 등)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
 - 경영 악화는 시청률 경쟁을 위한 선정적·자극적 콘텐츠의 생산으로 이어져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신뢰도 하락 초래



- 지상파·비지상파 간,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제고 등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규제체계 확립 요구 증대
 - 특히,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전 산업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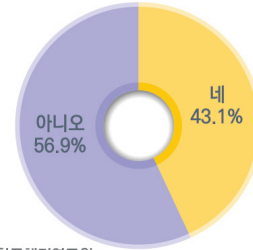


재원구조 개편을 통한 콘텐츠의 신뢰 회복, 낡은 규제의 개선 및 공정 경쟁을 통한 생태계 내 모든 참여자의 동반성장 방안 모색 필요

▣ (지능정보사회 도래) 불법유해 콘텐츠 등 이용자 피해 증가

- 지능정보사회기술 확산에 따라 AI 알고리즘 기반 추천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와 함께 여론 양극화, 확증편향과 차별 등 역기능 증가
- 감염병 등의 시기, 허위조작정보의 무분별한 생산·유통·소비로 사회 불안 야기
 - ※ 국민 43.1%가 재난 및 안전사고 관련 허위정보 노출 경험('20, 한국행정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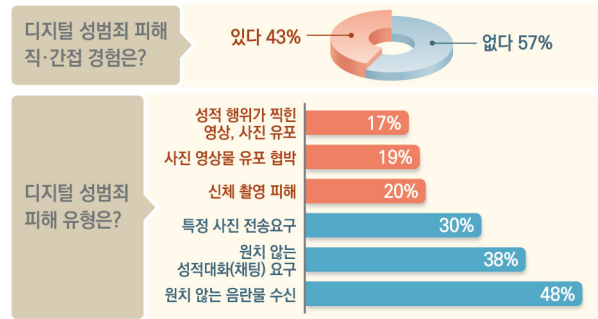
[허위이거나 허위로 의심되는 재난안전 정보·뉴스를 전달받은 경험]



자료 : 한국행정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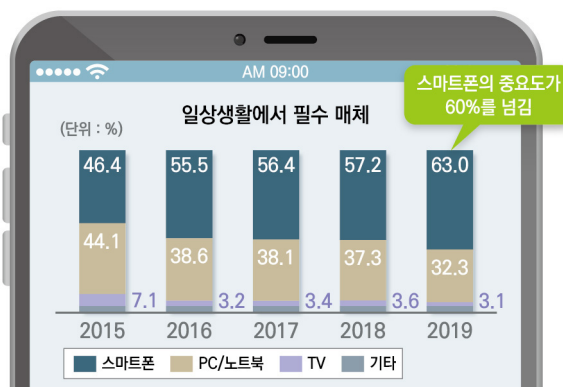
- 익명성·폐쇄성이 보장된 불법사이트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증가
- 이동통신 단말기 및 통신·인터넷 서비스가 생활 필수재가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이용자 불편 빈발

[디지털 성범죄 피해실태 및 인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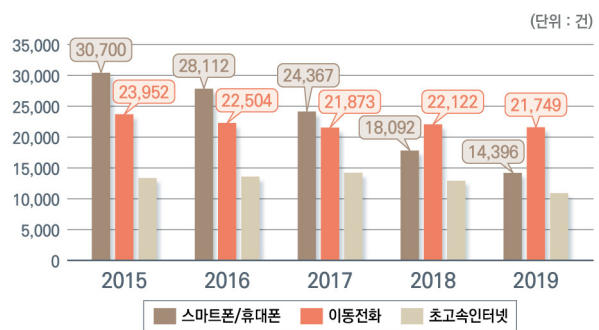
자료 : 서울시(2019)

-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의 잦은 변경, 불필요한 앱 선택재 등 이동통신 서비스 전 과정에 걸쳐 이용자 불편사항 해소 필요성 증대
- ※ 한국소비자원의 상담다발 민원 중 상위권 차지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상담다발 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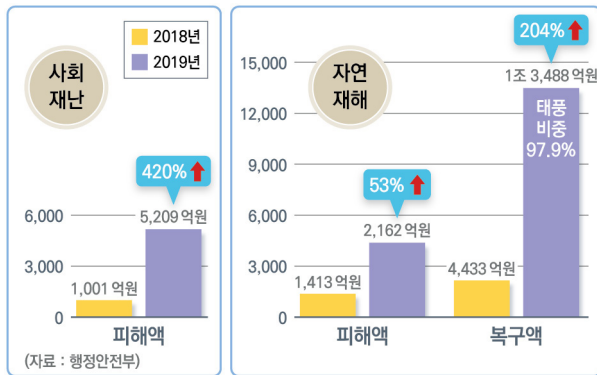
자료 : 한국소비자원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대응 강화 및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 체계 구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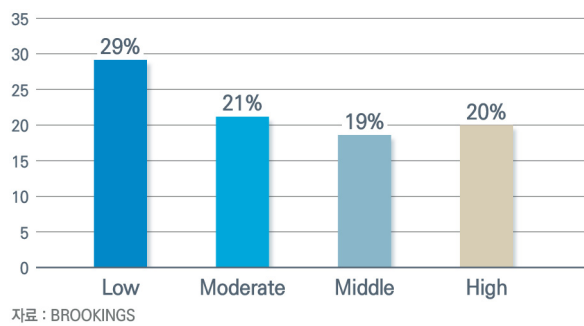
☐ (포스트 코로나19) 재난의 일상화·비대면(Untact) 사회로의 전환

- 장마, 태풍, 감염병 등 일상화된 재난으로 인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 자리 잡음
 - 특히, 재난은 취약·소외계층에 더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안전과 복지 차원에서 지역·공동체 미디어의 중요성이 증대
 - * 코로나19로 일자리나 소득 감소 비율이 저소득층에서 더 크게 나타남(BROOKINGS, 2020)

[사회재난·자연재해 피해·복구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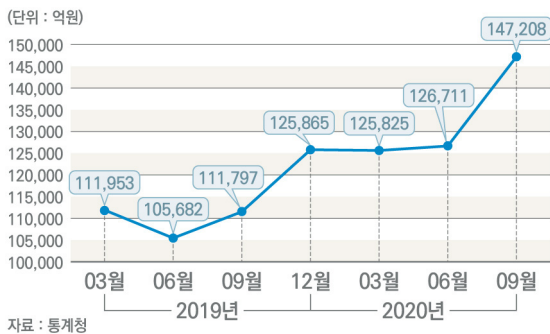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또는 소득 감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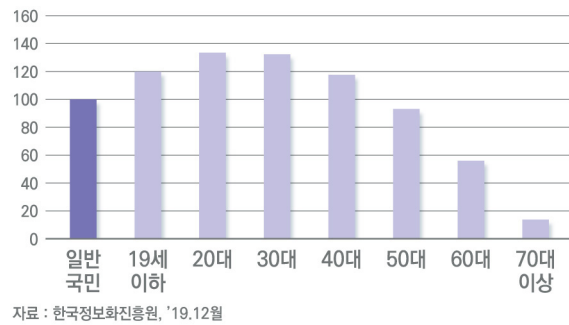


- 비대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디지털 기기 보유, 활용능력 등 국민 간 디지털 불평등 심화
 - 전 국민 대상 디지털 인프라의 확충, 디지털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교육 강화 필요

['19~'20 온라인 쇼핑 동향 조사]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재난으로부터 모든 국민이 보호 받고 모든 국민이 디지털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포용 사회 구축 필요

환경변화에 따른 추진전략

환경변화

- 디지털 대전환
- 미디어 경쟁 심화
- 지능정보사회 도래
- 재난의 일상화

주요이슈

- 영역 해체와 경쟁 심화
- 재원악화와 불공정 증대
-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 증가
- 재난 대응체계 강화

대응 방향

- 공적가치 강화 및 재원구조 개선
- 낡은 규제 정비와 공정 경쟁 촉진
- 안전한 디지털 사회와 미디어복지 확대

추진 전략

- 미디어 신뢰 회복
- 방송통신 성장 지원
-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

II



비전 및 정책과제

비전 및 추진전략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



코로나19 위기극복 적극 지원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1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생존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언론으로서 미디어의 공적기능이 약화되고 산업 경쟁력도 약화
- 미디어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사 허가·평가 제도 전반을 개선하고 공영·지역방송 등의 공적서비스 확대방안을 마련할 필요

▣ 주요 추진내용

✓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강화

-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 미디어 융합시대 방송의 공적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체별 특성에 적합한 허가·승인 제도 및 방송평가제도 마련
 - TV·라디오, 지상파·종편·보도PP, 공·민영, 중앙·지역방송 등 매체별, 사업자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승인제도 마련('21)
 - 방송평가 취지, 사업자간 변별력 등을 고려한 새로운 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21)
-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평가)**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무 강화를 위해 공영방송의 기본책임과 특별책무를 규정('21)
 -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는 구체적인 '공적책무 협약제도*'로 대체하여 이행여부를 엄격히 점검(방송법 개정안 발의, '22)
 - * 공영방송 서비스별(TV, 라디오, 온라인 등) 공적책무의 기본적 내용을 규정하고 방통위와 공영방송 간 협약 체결
- **(공영방송 임원선임 절차 개선)** KBS·EBS 등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선임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공영방송사 임원 임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21.6월)

▼ 미디어 공공성 강화

- **(다채널방송·교육콘텐츠 지원)** 공영방송이 방송·통신 및 융합매체를 통해 새롭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교육·재난대응 등 공적서비스를 강화하고 시청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KBS·EBS 등에 대한 다채널방송(MMS) 법적근거 마련('21)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콘텐츠의 수요 증가에 따라 초·중생, 장애아동의 몰입도를 높이고 교육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EBS의 실감형 교육 콘텐츠(AR/VR) 제작 지원('21)
- **(방송프로그램 공정성 강화)** 뉴스·시사 프로그램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종편·보도PP에 추가된 공정성 관련 재승인 조건 이행점검 강화
- **(시청자 참여 확대)** 시청자 평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지원 및 시청자위원회 기능 강화를 통한 시청자 참여 확대
- **(지역방송 활성화)** 지역밀착 콘텐츠에 대한 지역방송사간 공동제작, 신유형 콘텐츠 제작, 지역방송과 지자체 간 협력모델 발굴 등 지원 확대('21~)
-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공동체 라디오 신규허가를 추진('21)하고 콘텐츠 제작 및 공동체 라디오 전문교육 지원 확대('21~)
 - ※ (사업자 현황) 서울 관악·마포, 경기 성남, 충남 공주, 대구 성서, 경북 영주, 광주 북구 7개
- **(남북 방송·통신 교류 지원)** 방송통신을 통해 남북 간 동질성 회복 및 통일 의식을 제고하고, 민·관의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기반 마련
 - TV·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에 통일관련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고 국제공동 연구 등을 통해 북한의 방송통신 이용실태를 조사*·제공
 - * 방송통신발전기본법('19.12.10) 및 시행령 개정('20.8.4)에 따라 북한의 방송통신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추진
 - 남북 방송통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남북한 간 방송통신 분야 상호교류를 위한 사업과 조사·연구 추진

2 방송 자원 구조 개편

▣ 현황 및 문제점

- 방송 프로그램의 주요 제작자원인 방송광고 시장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공영방송 수신료는 4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음
- 방송의 공적 가치를 유지하고,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등 방송산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송 자원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 주요 추진내용

✓ 수신료 제도개선

- (수신료 제도 합리성 제고) 수신료 산정과 사용내역의 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영방송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신료 제도개선 추진
 - 국민이 수신료의 쓰임을 잘 알 수 있도록 공영방송의 수신료와 다른 수익 간 회계 구분, 수신료 사용내역의 공개 의무화('20.9월 방송법 개정안 발의)
 - 공정하고 투명한 수신료 산정을 위한 방송, 경영, 회계 등 전문가 중심의 수신료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방송법 개정안 발의, '21.6월)

✓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

-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개선) 지상파방송의 광고매출 감소에 따른 결합 대상 중소방송사 지원금액 동반 감소, 결합판매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20.4월) 등을 고려, 중소방송사 자원 지원을 위한 대안 마련
 -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협의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도개선안 마련('21.하)

[지상파방송 및 결합판매 광고매출]

(단위 : 억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CAGR
지상파방송 광고매출	21,802	20,675	18,975	19,113	16,227	14,121	13,007	10950	-9.4%
결합판매 광고매출	2,480	2,344	2,159	2,167	1,835	1,582	1,450	1220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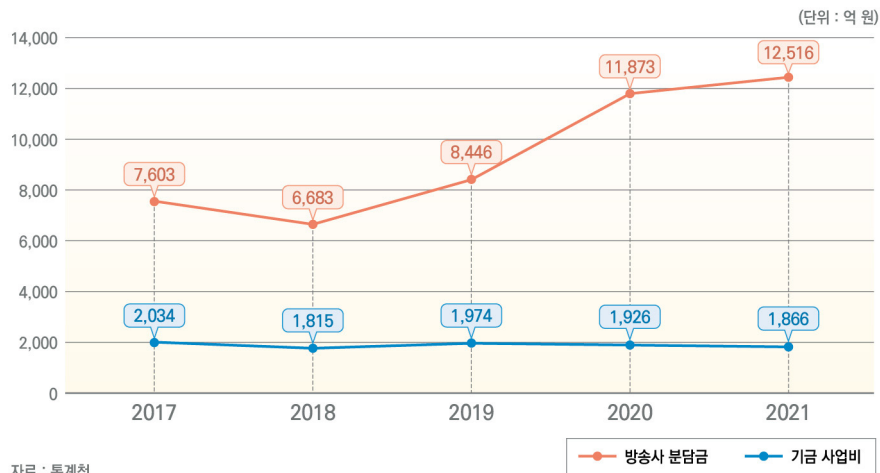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 **(미디어렙 판매영역 확대)** 방송·온라인을 통합한 광고 판매를 통해 광고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디어렙 판매영역을 인터넷·모바일 영역으로 확대하는 미디어렙법 개정안 마련 및 입법 추진('21~)
- **(정부광고 수수료 배분 합리화)** 정부광고 중 방송광고는 방송분야 발전을 위해 환원되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 추진
- **(코바코 역할 재정립)** 공공 미디어렙인 코바코의 광고 진흥 등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기관의 역할 및 조직 재정립('22~)

기금제도 개선

- **(방송통신발전기금 자원 확대)** 사업비는 지속 증가하는 반면 분담금 규모는 감소함에 따라 분담금 징수 대상 확대, 추가 자원 발굴 등 기금 자원 확대 추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규모 및 사업비 지출 추이]



- **(방송통신발전기금 통합)** 자원과 용도가 유사한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간 통합을 통해 기금 운용의 신축성과 효율성 제고

※ 양 기금 통합을 위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의원발의) 과방위 계류 중

- **(기금의 효율적 사용)**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자원 성격에 맞지 않는 지원은 축소하고 지역방송, 재난방송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국악방송, 아리랑TV, 언론중재위원회 등에 대한 예산지원과 관리·감독기관 불일치 해소 추진(문체부·기재부 협의)
 - 재난방송, 지역방송, 공익적 가치가 높은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 지원 확대

3 디지털 시대 재난방송 대응체계 고도화

▣ 현황 및 문제점

-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자연재난, 미세먼지·코로나19 등 사회재난의 일상화에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 재난방송 강화 필요
- 체계적인 재난관리,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방송 등 재난에 종합적으로 대응

▣ 주요 추진내용

✓ 재난방송종합정보센터 구축

- **(재난방송 고도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적 자연재난, 반복적 감염병 등 다양한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방송 체계를 고도화
 -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방통위 재난방송상황실 설치('21)
 - 공공정보, 기상정보 등 맞춤형 재난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재난방송상황실을 '재난방송종합정보센터'로 확대 구축('23)
 - 재난 현장상황, 대피소 정보 등을 적시에 지도에 그래픽으로 제공하는 '재난정보제공 시스템' 구축('21)
- **(재난정보 공유)** KBS 재난CCTV 영상, 재난유형별 국민행동요령 동영상 등을 타방송사에 제공하기 위해 KBS·방재기관·지자체 간 협력체계 강화(연중)

✓ 재난방송 수신 사각지대 해소

- **(터널내 수신환경 개선)** 수신환경 점검대상 라디오 채널 수를 확대하고 수신 불량 원인에 따른 해소방안 등 컨설팅을 강화
 - 기술컨설팅을 받은 터널에 대해서는 개선될 때까지 반복적 점검(연중) 및 수신설비 설치도 일부 지원('23)
- **(재난방송 수신채널 다각화)** 기존 방송채널 뿐만 아니라 OTT, 소셜미디어, 포털 등으로 재난방송 제공 채널을 다각화('23.6월)

- 행안부의 국민재난안전포털 및 안전디딤돌 앱, 지자체의 ‘서울안전’, ‘경기 안전대동여지도’ 등 지역재난 관련 앱을 통해 재난정보 공유 강화

- (수어방송 강화) 재교육을 강화해 수어 통역사의 재난방송 전문성을 강화하고 재난방송 수어 통역 인력풀도 확대('21, 100명)

▼ 지역 맞춤형 재난방송 체계 구축

- (지역 맞춤형 재난정보 제공) 지역 밀착도 높은 재난방송 실시를 위해 지역 방송사간, 지역 방송사와 지자체간 협력 강화('22)
 - 상습 재난발생 지역을 선정하여 매체·채널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민들로 ‘시민안전기자단’을 육성하여 국민 참여 강화
- (재난방송 제작지원 확대) TV·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의 재난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21) 및 예산 확보('22)

▼ 재난방송 정책역량 강화

- (민관협력체계 개선) ‘중앙(지역)재난방송협의회*’ 운영체계 개편을 통해 재난방송 민관 협력체계를 효율화
 - * 「재난안전법」에 따라 방통위, 과기정통부, 방송사 등이 참여하여 재난방송 관련 정책을 논의
- (전담조직 신설) 일상화된 다양한 종류의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방송을 전담하는 담당인력 및 조직 확대 추진

4 허위조작정보 및 성범죄물 대응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인터넷·스마트폰 대중화와 1인 미디어의 성장과 함께 허위조작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어 공론의 장을 훼손
-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디지털 성범죄물 등 디지털 역기능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주요 추진내용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 활성화

- (팩트체크 활성화)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을 활용하여 전문가와 시민 간 팩트체크 협업을 지원하고 협업 결과물은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여 올바른 정보 확산에 기여
-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고도화) 팩트체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에 탑재
 - 특정 데이터의 특징 분석 및 사실관계의 자동 판별 등에 관한 시스템 구축('22), 교육자료 DB화('21~), 모바일 앱 개발('21) 등 추진

[오픈 플랫폼을 활용한 팩트체크 활성화]



- (정보판별력 제고·팩트체크 홍보강화) 전국민 대상 맞춤형 팩트체크 교육 지원 확대('21~), 팩트체크 우수사례 공유 등 공모전 개최(매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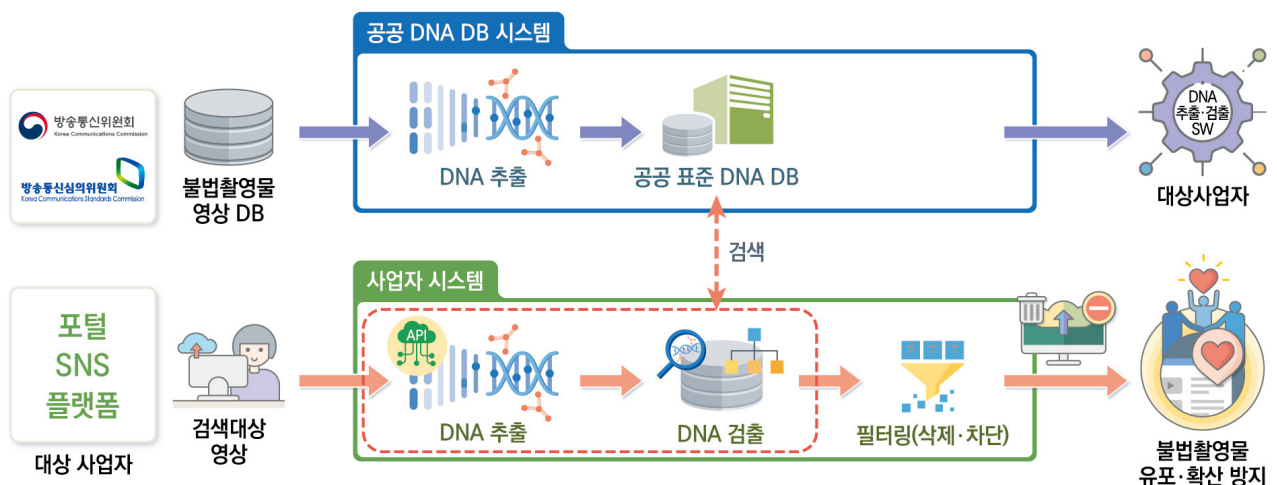
▼ 허위조작정보 대응 강화

- (대응매뉴얼 마련 등 제도개선) 허위조작정보를 관련 기관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 지원
 -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 대응 사례 등을 검토하여 '재난상황 허위조작정보 대응 매뉴얼' 마련('21)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법안 국회 입법 지원

▼ 디지털성범죄물 등 불법정보 대응 강화

-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유통방지 조치 등의 의무를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강화('21~)
 -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여부 확인 및 책임자교육을 실시하고,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에 대한 이행점검('21~)
 - 디지털성범죄물 필터링 조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 DNA DB* 개발('21)
- * 디지털성범죄물 복제·변형물까지 찾아낼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물의 특징값을 추출하여 사업자에게 제공

[표준 DNA 기술 개발 개념도]



- **(불법스팸 규제 강화)** 스팸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20~), AI기반 스팸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21) 등 스팸전송 차단을 위한 기술적 대응 강화
- **(인터넷 상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및 광고금지에 대한 모니터링 확대, 성범죄 노출 방지를 위한 랜덤채팅앱 현장 점검('21~)
 -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관리 사업인 '사이버안심존'을 확대*하고 성착취물 제작·유포가 빈번한 다크웹 차단기능을 도입('21)
 - * 사이버안심존 참여 학교 확대('20년 1,840개교 → '21년 2,150개교 → '23년 2,850개교)

✓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 **(임시조치 및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 권리침해 구제를 위한 임시조치*와 사이버 명예훼손제도**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법개정 추진('21)
 - 정보게재자 이의제기권 신설, 임시조치 기간 단축,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 신설 등 검토
 - * 정보통신망 상의 정보를 통해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30일)하는 조치
 - ** 정보통신망법 상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디지털시민역량 제고)** 시민 스스로 안전하고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사이버 폭력 등 디지털 역기능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 인터넷윤리체험관, 인터넷윤리 집중홍보 주간 등을 통해 디지털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사이버 인터넷윤리체험관에서 사용할 온라인 콘텐츠 개발·보급

방송통신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5 미디어산업 활력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미디어 소비가 모바일로 이전되고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진입 본격화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방송통신사업자는 구조적·재정적 어려움에 직면
-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질높고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지원해 한류 콘텐츠의 경쟁력 제고 필요

▣ 주요 추진 내용

▣ 방송미디어산업 활성화

- **(방송 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방송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방송통신 융합 환경 변화에 맞추어 광고·편성규제 개편 및 생태계 기반 조성 방안 마련('21)
 - **(민영방송 자율성 제고)** 방송시장의 경쟁심화에 대응해 국내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환경 조성
 - 고품격·대형 기획 프로그램 제작투자를 위한 소유·겸영 규제 완화('22~)
 - 지역·중소 방송사의 콘텐츠 제작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상호겸영 규제(일방 7%, 교차 5%) 완화('22)
 - **(공익적 콘텐츠 제작지원 강화)** 공영방송(KBS·EBS), 지역·중소방송(지역 지상파), 전세대 공감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제작지원(신규 추진)('22~)
 - **(라디오방송 활성화)** 라디오 매체의 특성을 감안한 활성화 정책 추진
 - AM과 표준FM의 기능 조정*, 주파수 상황을 고려해 신규 라디오방송 허가정책 마련('21~)
- * 일부 AM 송출을 중단하되 KBS 전국 방송망, 재난·안보 관련 방송, 국제방송 등은 유지

- 스마트폰 FM 수신 활성화, 음악저작권료 개선, 라디오 통합 앱·포털 개발을 지원하고 디지털라디오 도입 방안을 마련('21~)
- 재난방송 역할 강화, 라디오 발전지원계획 수립, 라디오 진흥을 위한 실행기구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라디오 지원 특별법 발의('22)
- **(방송콘텐츠 아카이브 구축)** 보존가치가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여 문화유산으로 전승하기 위한 아카이브 구축('22~)

▼ **낮고 볼필요한 규제 정비**

- **(편성규제 개선)** 방송사의 편성 자율성 및 콘텐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편성에 관한 규제를 필요 최소한도로 축소
 - 규제 실효성과 사업자간 형평성을 고려한 편성규제 개선방안 마련('21) 및 법령 개정('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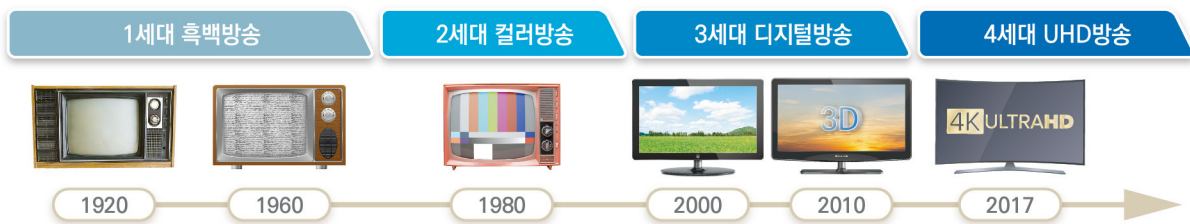


- **(시청점유율 제도 개선)** 실시간TV와 일간신문 영역에 한정된 시청점유율 산정범위를 온라인·모바일 영역의 N스크린까지 확대
 - N스크린 시청기록을 통합시청점유율에 반영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21) 및 통합시청 점유율 조사 정식 도입('22~)
 - ※ 통합시청점유율 조사에 관한 조사데이터·방법론·매체별 통합 기준 등에 대한 민관논의를 통해 보다 정확한 조사 방법 개발
 - 방송프로그램별 시청시간·시청경로 등을 방송통계포털을 통해 공개하여 미디어 통계의 업계 활용도를 제고('21~)

▼ 지상파 UHD 서비스 활성화

- (지상파 UHD 전국망 구축 완료) 현재 수도권과 광역시까지 구축된 지상파UHD 방송망을 2023년까지 시·군 지역으로 확대
- (UHD 시청자 접근성 향상) 시청자가 공시청설비, 셋톱박스를 통해 편리하게 지상파 TV를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및 보급, 홍보 등을 확대하고 유료방송 재전송을 위한 방송사간 협의도 지원
- (UHD 편성비율 확대) UHD 콘텐츠 최소편성 의무를 2020~2022년 20%, 2023년 25%, 2024년 35%, 2025년~2026년 50%로 확대
- (UHD 혁신서비스 활성화) 공익적 목적을 위한 다채널 서비스(MMS), UHD 주파수 내 이동형 서비스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간소화된 절차로 시범방송을 허용하고 관련법령을 정비

[TV방송의 변화]



▼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 (해외진출 제작지원) 해외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위하여 한국 방송프로그램의 해외 호응도, 국가별 인기 요인 등 분석 제공
 - 신남방(태국)·신북방(러시아) 국가와 방송공동제작협정 체결 확대 및 공동 제작비('21년 5억원) 지원, 방송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개최
- (해외진출 유통지원) 해외 피칭포럼 참석, 비즈니스 매칭 지원 등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 유치 지원
 - ATF(아시아텔레비전포럼), MIPTV 등 주요 국제 행사에서 국내 중·소 방송사업자 및 제작사의 비즈니스 매칭 지원
 - 방송사·제작사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해외 불법유통 실태를 파악하고, 문체부 저작권 위원회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해외 불법유통 적극 대응
 - OTT 해외시장 및 이용자 콘텐츠 선호도에 대한 분석, 국제행사 개최 등 국내 OTT 산업의 해외진출 지원('22~)

6 방송 광고 규제 패러다임 전환

현황 및 문제점

- 방송통신 및 전체 미디어 시장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방송광고 시장의 규제는 수십 년간 큰 변화 없이 지속
- 기존의 방송광고 제도 전반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여 매체 간 규제형평성 및 창의성을 제고하고 광고규제 합리화 추진

주요 추진내용

- (네거티브 규제 도입) 온라인·모바일 매체의 급속한 성장, 글로벌 콘텐츠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복잡하고 형식적인 기존 규제를 원칙 허용·예외 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과감히 전환('21~'22)
 - 세분화된 방송광고 유형·시간 규제 단순화, 방송광고 허용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21), 사후규제 체계 명확화('22)
 - 가상·간접광고 및 협찬고지(횟수·시간) 등에 대한 형식규제도 완화('21)



- (광고·협찬 규제 개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방송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송매체별 규제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합하도록 규제체계 합리화('21~'22)
 - 중간·가상·간접광고, 협찬고지 등 방송매체 간 광고·협찬 규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송법령 개정('21)
 - 아울러, 미디어 및 기술 변화를 고려하여 신유형광고 제도화 및 통합방송법 체계 수립에 발맞춘 종합적인 광고 규제체계도 마련('22)

7 공정경쟁 환경 조성

▣ 현황 및 문제점

- 국내외 사업자간 차별적 규제, 방송 제작현장 근로 환경,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 지속
- 상생과 공정경쟁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주요 추진내용

✓ 통신·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 **(결합판매시장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고 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결합판매 관련 제도의 법적근거 명확화('21)
 - 유선 판매점 사전승낙제,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서비스, 집합건물 독점계약 개선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반영
 - 결합판매시장의 허위과장 광고, 해지제한, 경품 차별 등 불·편법 행위에 대해 사업자·유통망의 자율규제 추진('21~)

✓ 통신·인터넷 사업자간 차별적 규제 해소

- **(망이용 환경 개선)** 사업자 간 차별적인 망 이용계약 금지, 망 이용 관련 실태조사 근거 마련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1)
 - 통신망 이용·제공 관련 차별적 조건 부과, 계약체결 관련 금지행위, 기간통신사업자 자료제출 의무 등 신설
- **(규제 형평성 제고)**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점검(매년)을 통해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행력 강화
 - *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20.8월 시행)에 따라 법규위반 등에 대한 물품·서류 제출 대리
 - 주요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피해예방 활동, 불법정보 유통방지 노력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매년)
 - ※ 국내대리인(전기통신사업법 개정, '20.12월 시행)을 통해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실효성 확보

방송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 **(방송시장 사후규제 정비)**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권과 신유형 금지행위 도입을 위한 방송법·IPTV법 개정('21~)
 - 금지행위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과 관련 매출액 기준 정비 등 과징금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법·IPTV법 시행령 개정('21)
- **(금지행위 실태점검)** SO의 인수·합병으로 등장한 대규모 유료방송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실태점검 강화('21)
- **(외주제작시장 상생환경 조성)** 지상파4사·종편PP4사 대상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이행 실적을 반기별 정기점검(매년)
 - 표준계약서 사용률, 권리배분 등 방송사-외주사간 외주계약 실태 조사(문체부 공동)
- **(협찬의 투명성 제고)** 협찬의 정의 및 허용범위 명시, 의무적 협찬고지, 자료제출 의무 등 협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홈쇼핑 연계편성 방지 등을 위한 「방송법」 개정 추진('20, 방송법 개정안 국회 제출)
 - 홈쇼핑PP-지상파·종편PP의 연계편성 현황을 정기 점검하고, 협찬주에 대해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주지 않도록 제작경비 협찬에 대한 고지 의무 원칙 등 추가개선방안 마련('21~) 및 모니터링 강화(방심위 협조)

8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법제 마련

현황 및 문제점

- OTT 서비스 확산 등 미디어 간 융합이 확산되고 있으나 미디어 규제체계는 과거의 미디어산업별로 구분된 칸막이식의 낡은 틀을 유지
-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에서 벗어나 미디어 융합시대에 적합한 규제체계 확립을 위한 미디어 제도 혁신 필요

주요 추진내용

-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 도입)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까지 포함한 종합적 정책추진을 위해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 신설
 - 방송과 OTT 등을 포괄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법 제정 추진('21)
 - ※ 지상파방송, 유료방송 플랫폼, 유료PP, OTT 등을 모두 포함

현 행		변경안	
방송서비스 (실시간)	인터넷동영상서비스 (주문형,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방송망 (지상파, 케이블, 위성, IPTV 등)	인터넷망(개방형)	실시간	주문형
		실시간방송	실시간OTT
		VOD서비스	
		방송망 & 인터넷망	

- 서비스 분류체계 개편 시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 경쟁 활성화·공익성·이용자 보호 등 규제 목적, 여론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미디어 개혁기구) 근본적인 미디어 제도 개혁을 위해 학계·시민단체·관계부처·국회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기구인 미디어 개혁기구 설립시 적극 참여 및 지원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9 국민불편 원스톱 해결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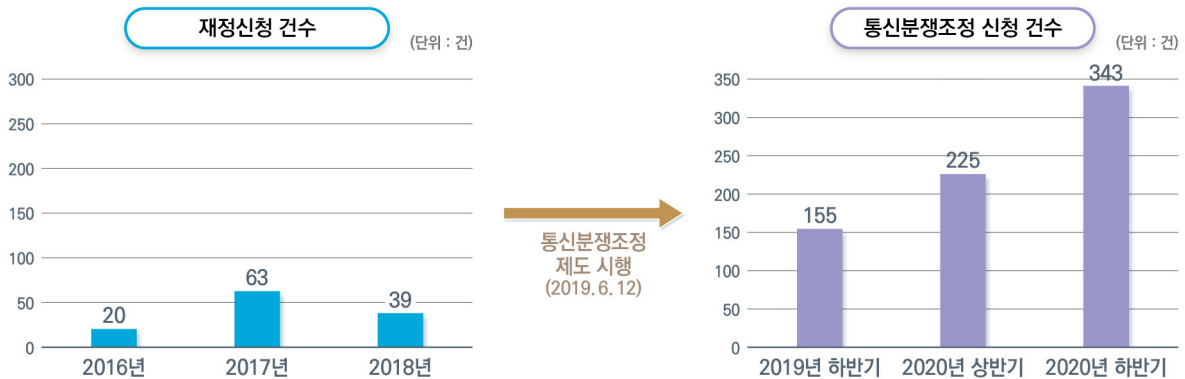
- 이동전화와 인터넷 서비스가 국민 생활의 필수재가 됨에 따라 이용자 피해 유형이 복잡·다양해짐
- 통신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이용자 부담경감, 불편사항 선제적 발굴 등 국민의 권익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 정책 필요

주요 추진내용

이용자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 (통신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현장검증을 강화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분쟁 조정
 - 빈발민원 등에 대한 현장 검증체계 구축 및 현지조사 강화('21~), 분쟁조정 신청절차와 피해구제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가동('21~)
 - ※ 분쟁조정 상담센터를 전국단위 거점별로 광역화(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통신분쟁조정 신청 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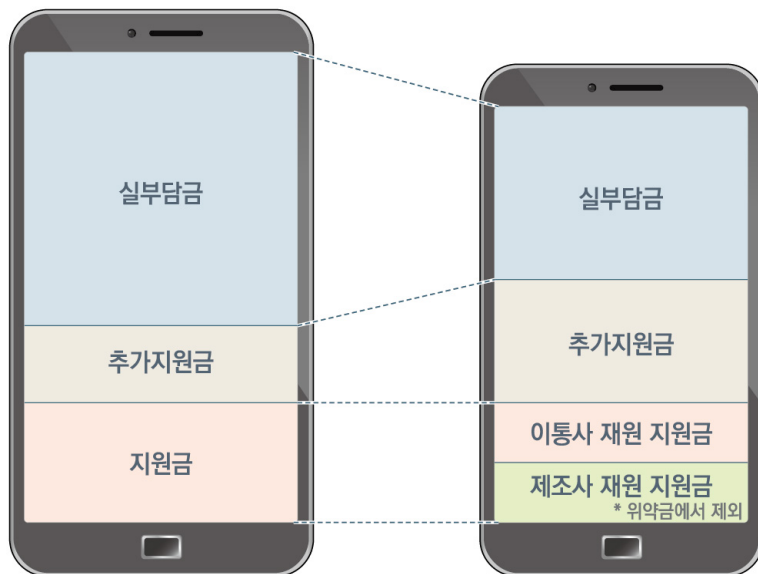


※ 신속하고 편리한 권리구제를 위해 기존의 통신분쟁재정제도를 통신분쟁조정제도로 개편

- **(원스톱 민원서비스 추진)** 방통위·과기정통부·방심위 등 기관별로 이송·처리하는 현행 방식을 대표전화(000번)로 통일하여 전화상담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기관 간 인력 교류 추진
 - **(시청자 권익보호 전담기구)**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사·연구, 시청자 불만처리와 피해구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전담기구 설치·운영('22)
 - **(통신장애 손해배상 제도개선)** 통신장애시 이용자 피해를 줄이고 통신사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법정손해배상 및 배액손해배상 도입 방안 검토('21)
 - 부가통신역무 제공 중단 시 중단사실 및 손해배상 기준·절차를 고지하는 기준시간을 기간통신역무와 동일하게 단축(4→2시간) 추진('21)
- ※ 기준시간 단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의원발의) 국회 계류 중

▼ 단말기 이용자 편익 확대

- **(공시지원금 제도개선)** 불투명한 단말기 출고가, 이용자 눈높이 보다 낮은 공시 지원금 등을 개선하여 단말기 이용자의 편익을 확대
 - 이통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에서 제조사의 지원금을 별도 공시함으로써 출고가를 투명하게 하고, 위약금에서 약정과 무관한 제조사 지원금을 제외해 위약금 부담 경감 추진('21~)
 - 유통점에서 이용자에게 추가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 범위(현행 공시지원금의 15%)를 확대하여 지원금 수준 향상 추진('21)



- **(단말기 부담 경감)** 단말기 주요 부품별 A/S 비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이용자의 비용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중고폰 가치 산정기준 등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점검('21~)
- **(규제 사각지대 최소화)**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 하는 한편, 해당 광고가 게재되는 온라인플랫폼 운영자의 역할강화 방안 검토('21~)

▼ 이용자 불편 해소

- **(모바일 앱 이용환경 개선)** 선택재 앱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필수 선택재 앱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21)
- **(신유형 광고 대응)** 온라인상 다른 정보를 가려 이용자 불편을 야기하는 플로팅 광고 등 신유형 광고에 대해 현황 점검 및 제재 강화('21~)
- **(신규 서비스 이용자보호 강화)** OTT, 라이브커머스 등 이용 규모와 민원이 증가하는 신규 분야를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21)
 - 구독경제 확대로 급증하고 있는 모바일 앱 결제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입·이용·해지의 이용 단계별 실태점검 강화 및 제도개선('21)

10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격차 해소

▣ 현황 및 문제점

- 비대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방송통신 미디어에 대한 원활한 접근과 이용이 생활의 필수 요소가 됨
- 방송통신 미디어가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외 계층에 대한 이용환경 개선 필요

▣ 주요 추진내용

- **(중장기 종합 지원체계 마련)** 새로운 방송환경에 맞게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강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21)
 -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시청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칭) 시청각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보장 지원법’ 제정 추진('22~)
 - 현행 저소득층과 중증장애인 대상 맞춤형 TV 보급(연 15,000대) 사업을 전체 시청각 장애인 대상으로 확대('22)
- **(스마트 수어 방송 활성화)** 시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편리하게 방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송사* 스마트수어방송 서비스 지속 지원
 - * 채널(6개) KBS·MBC·SBS·TV조선·JTBC·YTN, 플랫폼(3개) SKB·LG헬로·Skylife
- **(장애인방송 VOD 활성화)** 방송사별 제작여건,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VOD서비스 제작 지원('20, 지상파3사)
 - 지상파 3사 대상 VOD 서비스 제작 지원 사업을 EBS, 종편·보도PP, 일반PP 등으로 지원 확대
- **(디지털서비스 기술개발)** AI 기술을 활용한 음성-자막-수어전환 서비스 개발 및 시범운영 등 시청각장애인의 뉴미디어 접근권 제고
 - ※ 1단계 : 음성-자막 변환('19~'22), 2단계 : 자막-수어 변환('21~'22) 기술 개발

11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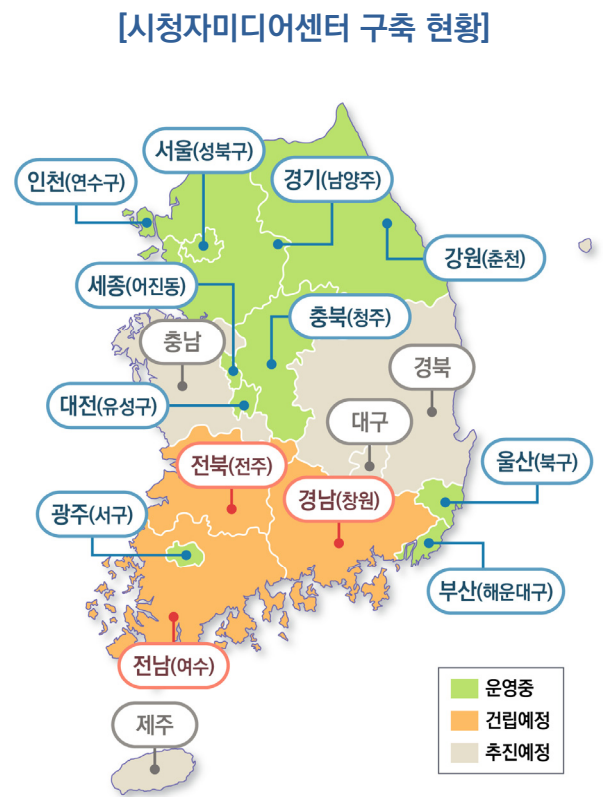
현황 및 문제점

- 코로나19 이후 생활 패러다임이 비대면 방식으로 급속히 전환됨에 따라 원격학습·온라인 거래시장이 급성장하고 OTT, SNS 등 디지털미디어 이용 급증
- 온라인서비스의 증가는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동시에 디지털 격차, 허위정보 등 역기능도 증대됨에 따라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 필요

주요 추진내용

미디어교육 광역거점과 소규모 미디어센터 간 연계 강화

- **(미디어교육 광역거점 구축 완료)**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학교·소규모 미디어 센터·지역 커뮤니티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미디어교육 허브 시설로 육성
- '23년까지 17개 광역시·도 단위의 시청자 미디어센터 구축 완료 후 시·군·구 단위 소규모의 미디어센터 구축 추진
- **(기관 간 연계 활성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소규모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원 등 교육기관 간 자료를 공유해 연계 활성화
- 교육·제작용 디지털장비를 소규모 미디어 센터 등에 위탁 운영하여 센터 미건립 지역과 원거리 지역민에 대한 미디어교육·제작 지원 ('21~)



▼ 온라인 미디어교육 강화

- **(온라인 미디어교육 플랫폼 활성화)** 온라인 미디어교육 통합 플랫폼인 ‘미디온’을 통해 시청자 미디어재단, 언론진흥재단, 정보화진흥원, 교육학술정보원 등 기관별로 보유한 미디어교육 콘텐츠를 공유·개방(‘21.하~)
 - 최신 기술(AR·VR 등)을 반영한 다양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교원·강사·학부모 대상 원격연수 실시 등 온라인 미디어교육 활성화
- **(소규모 밀착형 서비스 확대)** 근거리 공공시설을 찾아가 생활 속 디지털 미디어 활용을 돕는 소규모 밀착형 미디어교육 제공
 - 미디어 제작 장비를 탑재한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를 활용해 소외계층 대상으로 찾아가는 미디어교육과 체험 확대

▼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 **(마을 미디어교육 확대)** 주민들이 미디어를 통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대상 미디어교육 확대(‘20년 80개→’22년 100개 마을)
-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강화)** 정부부처(산하기관) - 방송사(참여) - 대학(인력양성)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시설·장비·인적자원 공유
 - 대학과 연계한 지역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비영리기관, 단체에 대한 수요 맞춤형 미디어교육 지원 및 컨설팅

▼ 미디어 교육 추진기반 마련

- **(민관협의체 구성)** 부처별로 분산하여 실시해오던 미디어교육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방통위·문체부·교육부·과기정통부·행안부 등 정부부처와 미디어교육 공공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운영 활성화(‘21~)

12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및 역량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지능정보서비스는 이용자 편익은 증진하는 반면 사생활침해, 편향성 강화 등 새로운 유형의 부작용 야기
- 미래사회의 트렌드, 이용자 행태변화 등을 분석해 이용자가 지능정보서비스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

▣ 주요 추진내용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규범 정립

- **(새로운 이용자보호 법체계 정비)** 인간의 행위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법체계를 AI 기반 지능정보 서비스 자체의 책임소재, 권리구제 절차 등을 포괄하도록 정비
 -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원칙’(19.11월)을 기반으로 ‘AI알고리즘 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 마련(21.5월), 법령정비 추진(22)
- **(이용자중심의 정책기반 마련)**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책대상인 사업자·이용자 등과 공동으로 실천방안 협의
 - 전국 2,411가구(4,233명) 대상으로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기술 수용도, 권리의식 등에 대한 패널조사 진행(연간)
 - 지능정보서비스 이해당사자와 민관 합동으로 정책 네트워크* 지속 운영, 지능정보사회 정책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양방향 소통채널 운영(21~)
 -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30인 내외) 운영, 국제 콘퍼런스 개최 등
- **(이용자 역량강화)** 이용자가 지능정보사회 역기능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서비스의 비판적 이해 및 주체적 활용 교육 실시(21~)
 - ※ 실제 삶과 밀접한 사례기반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연령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사를 양성하여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 지원
 - 이용자 교육뿐만 아니라 지능정보서비스 사업자 및 소비자 보호기관 컨설팅 등을 통해 이용자 역량강화 지원 다각화(22~)

▼ 안전하고 편리한 ICT 서비스 환경조성

- **(플랫폼 이용자보호 법제 마련)** 앱마켓, 전자상거래, 소셜미디어, 라이브커머스 등 플랫폼 영향력 확대에 따른 이용자 보호방안 마련
 - 플랫폼 유형별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이익 침해행위를 발굴하고 부당한 거래중단, 끼워팔기, 우선노출 등 금지행위 규정 정비('21)
 -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피해구제의 신속성·효율성 확보를 위해 동의의결제, 이행강제금 등 새로운 정책수단 도입('21)
 -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한 대형 플랫폼의 이익침해 방지('21), 라이브커머스 이용자 피해예방('21)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위치정보산업 규제 합리화)** 개인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는 완화하되 이용자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위치정보법 개정 추진('21)
 - ※ (진입규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 (권익보호) 범위반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위치정보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21 50개사 → '23 70개사)하고 위치정보 사업자의 위치정보 보호 조치에 대한 실태점검 강화
- **(안전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온라인 비대면 활동에 있어서 안전한 본인확인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본인확인 기술적 조치 등에 관한 관리체계 강화
 - 본인확인기관이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네트워크 안정성을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사후점검 하도록 조치('21~)
 - 이용자 본인확인 연계정보(CI) 활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보안점검 실시, 연계정보 악용 방지를 위한 CI 생성기술 고도화('21~) 등 추진

III



코로나19 극복 과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개요

-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난상황 허위조작정보 대응 및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제공, 원격교육 등 전국민 대상 온라인 미디어 교육 강화
 - 아울러 공익광고 제작,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 지원 등 추진

주요 추진내용

1 허위조작정보 대응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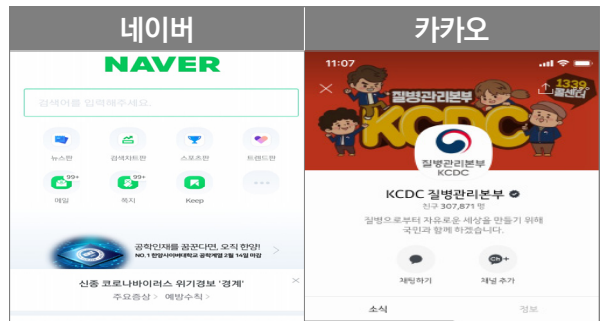
- 방통위·중대본·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허위조작정보 신속 대응
 - 중수본·질본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한 명백한 허위조작정보는 사실 관계를 사업자에게 전달
 -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올바른 정보 확산



- 허위정보를 관련 기관이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재난상황 허위조작정보 대응 매뉴얼’ 마련

2 민간자율 팩트체크 활성화

- 포털 등을 통한 정확한 정보 전달 및 전문가·시민 간 팩트체크 협업지원 등 팩트체크 활성화



- 팩트체크의 신속성·정확성 제고를 위한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고도화

* 전문가·시민 협업으로 팩트체크 과정·결과를 공개하는 전문사이트 ‘팩트체크넷’ 오픈 (’20.11월)

3 코로나19 관련 재난방송 실시

- 코로나19 단계별 행동요령, 방역지침 등 공신력 있는 재난정보 신속·정확 제공
- 재난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수어 및 외국어 자막 방송 확대



4 EBS를 통한 비대면 교육 강화

-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EBS의 실감형 교육 콘텐츠(AR/VR) 제작 지원('21)
- 온라인 개학의 원활한 진행과 공교육 보완을 위해 EBS 및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한 학습 지원



5 온라인 미디어교육 강화

- 시청자미디어재단, 언론진흥재단 등 다양한 기관별로 보유한 미디어교육 콘텐츠를 온라인 플랫폼에 공유·개방
- 근거리 공공시설,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직접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실시



6 공익광고 등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익광고 제작 및 국민공감대 형성
- 지역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송광고 제작비 등 지원



IV

추진 일정

추진 일정

사 업 명		'21년	'22년	'23년
1.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	매체별 허가·승인 체계마련	재허가 실시	재허가 (재승인) 실시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평가	공영방송 책무 규정 및 협약방안 마련	방송관계법 개정 지원	(법개정시) 후속조치
	공영방송 임원선임 절차 개선	(법개정시) 후속조치, 공영방송 임원선임 기본계획 마련 및 선임	(법개정시) 후속조치, 공영방송 임원선임	(법개정시) 후속조치
	다채널방송·교육콘텐츠 지원	MMS 방송법 개정	(법개정시) 후속조치	(법개정시) 후속조치
		EBS 실감형 교육콘텐츠 제작지원	EBS 실감형 교육콘텐츠 제작지원 확대	EBS 실감형 교육콘텐츠 제작지원 확대
	방송프로그램 공정성 강화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계속)	이행실적 점검 및 재승인 심사
	시청자 참여 확대	시청자평가원 전문 교육방안 마련	시청자평가원 전문 교육과정 운영	시청자평가원 전문 교육과정 운영(계속)
	지역방송 활성화	OTT 등 신유형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예산 지원 확대 추진	지역방송 공동제작 포맷 등 개발 추진	지역방송·지자체 간 지역성 반영 협력 특화 모델 개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신규사업자 선정	재정지원 확대추진	재정지원 확대추진
	남북 방송·통신 교류 지원	통일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통일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확대	통일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확대
남북방송통신 국제콘퍼런스개최		남북방송통신 국제콘퍼런스개최	남북방송통신 국제콘퍼런스개최	
북한방송통신이용 실태조사		북한방송통신이용 실태조사 확대	북한방송통신이용 실태조사 확대	
-		(여건조성시) 남북방송통신 토론회 개최 남북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여건조성시) 남북방송통신 토론회 개최 남북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확대	
2. 방송 재원구조 개편	수신료 제도 합리성 제고	수신료위원회 설치 등 법개정안 발의	방송관계법 개정 지원	(법개정시) 후속조치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개선	결합판매제도개선 방안 연구반 운영 및 제도개선안 마련	결합판매 제도 개선 법령 개정 추진	(법개정시) 후속조치
	미디어렙 판매영역 확대	입법지원	(법개정시) 후속조치	(법개정시) 후속조치
	정부광고 수수료 배분 합리화	정부광고법 개정지원	정부광고법 개정지원	(법개정시) 후속조치

사 업 명		'21년	'22년	'23년
2. 방송 재원구조 개편	코바코 역할 재정립	관련법 개정, 예산 확보 등 기반마련	판매영역 확대 및 디지털기반 사업추진	(계속)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원 확대	부처 협의 및 법 개정안 검토	관련 법안 개정 지원	후속조치 (신규사업 확대 등)
	방송통신발전기금 통합	국회 상정법안 의결 지원	사업 과목구조 개편	통합 기금 운용
	기금의 효율적 사용	지속협약	지속협약	지속협약
3. 디지털 시대 재난방송 대응체계 고도화	재난방송 고도화	재난방송 상황실 설치	재난방송 체계 개선	재난방송종합정보 센터 구축
	재난정보 공유	유관기관 협의	재난정보 공유 확대	재난정보 공유 확대 (계속)
	터널내 수신환경 개선	유관기관 협의 및 예산확대 추진	유관기관 협의 및 예산확대 추진	수신설비 설치 비용 지원
	재난방송 수신채널 다각화	매체확대 협의	매체확대	매체확대(계속)
	수어방송 강화	통역사 인력풀 확대	수어 통역사 재교육	수어 통역사 재교육
	지역 맞춤형 재난정보 제공	유관기관 협의	시민 참여 확대	시민 참여 확대(계속)
	재난방송 제작지원 확대	법적 근거마련 추진	관련법령 개정 및 예산확보 추진	관련법령 개정 및 예산확보 추진(계속)
	민관협력체계 개선	유관기관 협의	관련법령 개정추진	후속조치
	전담조직 신설	조직개편 추진	조직개편 추진(계속)	조직개편 추진(계속)
4. 허위조작정보 및 성범죄물 대응 강화	팩트체크 활성화 및 플랫폼 고도화	모바일앱 개발	팩트체크 시스템 기능 개선	팩트체크 시스템 고도화
	정보판별력 제고·팩트체크 홍보강화	교육지원 대상 확대	교육지원 내용 다변화	교육프로그램 개선
		공모전 개최	공모전 확대	공모전 대상 다변화
	대응매뉴얼 마련 등 제도개선	재난상황 대응매뉴얼 마련	대응매뉴얼 개선사항 검토	(필요시) 대응매뉴얼 개선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디지털 성범죄물 표준 DNA 개발	DNA 활용한 필터링 지원	DNA 기술 보완사항 검토
		부가통신사업자 의무이행 점검	(필요시) 제도보완사항 발굴	(필요시) 제도보완 추진
	불법스팸 규제 강화	스팸 분석시스템 구축	스팸 분석시스템 운영	스팸 분석시스템 보완
	인터넷상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청소년보호 보호조치 모니터링 확대	모니터링 내용 및 기준 등 보완사항 검토	(필요시) 모니터링 내용 및 기준 등 보완
		청소년 대상 '사이버안심존' 참여학교 확대 (2,150개)	청소년 대상 '사이버안심존' 참여학교 확대 (2,500개)	청소년 대상 '사이버안심존' 참여학교 확대 (2,850개)
	임시조치 및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법개정시) 하위법령 개정	(법령개정시) 후속조치
디지털시민역량 제고	교육지원 대상 확대 및 다변화	사이버 인터넷윤리 체험관 콘텐츠 신규 개발	사이버 인터넷윤리 체험관 콘텐츠 개선	

사 업 명		'21년	'22년	'23년
5. 미디어 산업 활력 제고	방송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활성화 정책 방안 마련	이행점검 및 후속조치	이행점검 및 후속조치
	민영방송 자율성 제고	민영방송 허가방안 마련	민영방송 재허가 등 개선 추진	민영방송 재허가 실시
		소유·겸영규제 방안 마련	방송법 개정 추진	(법개정시) 후속조치
	공익적 콘텐츠 제작지원 강화	공영방송(KBS·EBS) 및 지역·중소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확대	공영방송(KBS·EBS) 및 지역·중소방송, 전세대 공감 프로그램 제작지원	공영방송(KBS·EBS) 및 지역·중소방송, 전세대 공감 프로그램 제작지원(계속)
	라디오방송 활성화	라디오 정책 협의체 운영	라디오 정책 협의체 운영	라디오 서비스 체계 개선
		라디오 서비스 체계 개선 지원	라디오 서비스 체계 개선 지원	
		라디오 지원 특별법 제정 지원	라디오 지원 특별법 제정 지원	(법제정시) 후속조치
	방송콘텐츠 아카이브 구축	아카이브 구축 법제도 방안연구, 예산확보 추진	법안 마련 및 시범시스템 구축 추진 (예산확보 시)	시스템 구축·운영 (예산확보 시)
	편성규제 개선	편성규제 개선방안 및 법령 개정안 마련	(법령개정시) 후속조치	(법령개정시) 후속조치
	시청점유율 제도 개선	방송법 개정 지원	(법개정시) 후속조치	(법개정시) 후속조치
	지상파 UHD 전국망 구축 완료	시군 지역 UHD 방송국 허가	시군 지역 UHD 방송국 허가	시군 지역 UHD 방송국 허가
	UHD 시청자 접근성 향상	지상파-유료방송 재전송 협상 지원	지상파-유료방송 재전송 협상 지원	지상파-유료방송 재전송 협상 지원
	UHD 편성비율 확대	UHD 편성비율 (재)허가조건 부가	UHD 편성비율 (재)허가조건 부가	UHD 편성비율 (재)허가조건 부가
	UHD 혁신서비스 활성화	이동형서비스 시범방송, 다채널 방송 관련법 발의	(법개정시) 후속조치 혁신서비스 활성화 지원	혁신서비스 활성화 지원
	방송콘텐츠 해외 진출 제작지원	공동제작협정체결 협의	공동제작협정체결 확대	공동제작협정체결 확대
		방송공동제작지원	방송공동제작지원 확대	방송공동제작지원 확대
방송공동제작 국제콘퍼런스개최		방송공동제작 국제콘퍼런스개최	방송공동제작 국제콘퍼런스개최	
방송콘텐츠 해외 진출 유통지원	예산반영 추진	(예산반영시) 국제행사 참석 지원	(예산반영시) 국제행사 참석 지원	
	불법콘텐츠 유통관련 정책연구	불법콘텐츠 유통방지 지원	불법콘텐츠 유통방지 지원	

사 업 명		'21년	'22년	'23년
6. 방송 광고 규제 패러다임 전환	네거티브 규제 도입	광고규제 단순화 및 형식규제 완화 추진	사후 규제 체계 명확화 추진	(법령개정시) 후속조치
	광고·협찬 규제 개선	매체 간 규제 차이 해소 관련 법령 개정	신유형광고 제도화, 통합 광고규제 체계 마련	(법령개정시) 후속조치
7. 공정경쟁 환경 조성	결합판매시장 공정경쟁 촉진	전기통신사업법령 개정안 마련	전기통신사업법령 개정추진	(법령 개정시) 법령준수 여부 점검 및 후속조치
		공정경쟁 지원시스템 구축 추진	공정경쟁 지원시스템 운영	공정경쟁 지원시스템 보완
	망이용 환경 개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개정시) 하위법령 개정	(법령 개정시) 법령준수 여부 점검 및 후속조치
	규제 형평성 제고	국내대리인 점검 등 제도 운영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등 개선사항 발굴	(필요시) 제도개선 추진
		해외사업자 이용자 보호 평가	해외사업자 이용자 보호 평가 확대	해외사업자 이용자 보호 평가 개선
	방송시장 사후규제 정비	방송법·IPTV법 개정 지원	방송법·IPTV법 개정 지원	(법개정시) 후속 조치
		과징금 관련 시행령 개정		
	금지행위 실태점검	대규모 유료방송사 불공정행위 실태점검	불공정행위 실태점검	불공정행위 실태점검
	외주제작시장 상생환경 조성	가이드라인 반기별 점검	가이드라인 반기별 점검	가이드라인 반기별 점검
		외주계약 실태조사	외주계약 실태조사	외주계약 실태조사
협찬의 투명성 제고	제작비 협찬 등 관련 개선안 마련	협찬 모니터링 강화 및 홈쇼핑 연계편성 점검	협찬 모니터링 강화 및 홈쇼핑 연계편성 점검	
8. 시청각 미디어서비스 법제 마련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개념 도입	통합 법제도 방안 마련	통합법 제·개정 지원	(법개정시) 후속조치
	미디어 개혁기구	기구 설립시 적극 참여	기구 설립시 적극 참여	기구 설립시 적극 참여
9. 국민불편 원스톱 해결	통신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현지조사 강화	분쟁조정 상담센터 광역화 준비	분쟁조정 상담센터 광역화 등 확대·재편
		통신분쟁조정 지원시스템 신규 운영		
	원스톱 민원 서비스 추진	예산, 인력 관련 관계부처 협의	서비스 시스템 구축 추진단 운영	서비스 시스템 구축·운영
	시청자 권익보호 전담기구	예산, 인력 관련 관계부처 협의	재단내 전담기구 설치·운영	전담기구 운영(계속)
통신장애 손해배상 제도개선	제도개선 방안 검토	손해배상 강화 관련 법령 개정	(법령개정시) 법령준수 여부 점검 및 후속조치	

사 업 명		'21년	'22년	'23년
9. 국민불편 원스톱 해결	공시지원금 제도개선	단말기유통법 개정 추진	(법개정시) 법 준수 여부 점검	(법개정시) 법 준수 여부 점검
	단말기 부담 경감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점검	(예산반영시) A/S 현황 정보제공	(예산반영시) A/S 현황 정보제공 확대
		A/S 비용 공시제 추진		
	규제 사각지대 최소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역할 강화 방안 검토	(필요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시) 제도개선
	모바일 앱 이용환경 개선	필수 선택재 앱 기준 구체화	선택재 앱 삭제 제한 기준(안) 마련	선택재 앱 삭제 제한행위 점검
	플로팅 등 신유형 광고 대응	플로팅 광고 등 금지행위 점검	플로팅 광고 등 금지행위 점검(계속)	플로팅 광고 등 금지행위 점검(계속)
신규 서비스 이용자보호 강화	이용자보호 평가대상 확대	이용자보호 평가대상 기준 개선	이용자보호 평가 제도 개선	
	모바일앱 결제 관련 제도개선	모바일앱 결제 실태점검	모바일앱 결제 실태점검(계속)	
10.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격차 해소	중장기 종합 지원체계 마련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시청각장애인	(법제정시) 후속조치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	미디어 접근권 보장 지원법 제정 추진	
	스마트 수어 방송 활성화	스마트수어방송 참여 사업자 지원 (9개사)	스마트수어방송 참여 사업자 지원	스마트수어방송 참여 사업자 지원
	장애인 방송 VOD 활성화	제작지원 대상 확대 (EBS)	제작지원 대상 확대 (종편·보도PP)	제작지원 대상 확대 (일반PP)
디지털서비스 기술개발	자막-수어변환 시스템 기술 개발	(계속)	음성-자막-수어 시스템고도화	
11.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미디어교육 광역거점 구축 완료	대구·경북·제주·충남 센터 구축지역 선정	경남·전남 센터 구축 및 기타지역 센터구축 예산 확보	광역거점센터 구축완료
	기관 간 연계 활성화	지역미디어센터 연계 장비 위탁 운영 (15개소)	지역미디어센터 연계 장비 위탁 운영 (16개소)	지역미디어센터 연계 장비 위탁 운영 (17개소)
	온라인 미디어교육 플랫폼 활성화	온라인 미디어교육 콘텐츠 제작 확대	온라인 미디어교육 플랫폼 구축	온라인 미디어교육 플랫폼 고도화
	소규모 밀착형 서비스 확대	미디어나눔버스 운영 (164회) 및 소규모 밀착형 미디어교육 제공(50회)	미디어나눔버스 운영 (172회) 및 소규모 밀착형 미디어교육 제공(52회)	미디어나눔버스 운영 (181회) 및 소규모 밀착형 미디어교육 제공(54회)
	마을 미디어교육 확대	마을 공동체 미디어 교육 지원(90개)	마을 공동체 미디어 교육 지원(100개)	마을 공동체 미디어 교육 지원(110개)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강화	지역기관 연계 자문단 운영(40회)	지역기관 연계 자문단 운영(42회)	지역기관 연계 자문단 운영(44회)
	민관협의체 구성	분기별 회의 개최 및 협업과제 발굴·시행	분기별 회의 개최 및 주요 협업과제 추진	분기별 회의 개최 및 종합계획 성과 점검

사 업 명	'21년	'22년	'23년	
12.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및 역량 강화	새로운 이용자보호 법체계 정비	AI 추천서비스 기본원칙 마련	지능정보 서비스 법제 개선방안 마련	지능정보 서비스 법제 개선 추진
	이용자 중심의 정책기반 마련	정책네트워크 운영	정책네트워크 확대 운영	정책네트워크 다변화
	이용자 역량강화	역기능 대응 교육 지원	역기능 대응 지원 확대	역기능 대응 지원 방안 다변화
	플랫폼 이용자보호 법제 마련	규제체계 정비방안 마련	규제체계 관련 법령개정	(법령개정시) 법령준수 여부 점검 및 후속조치
		라이브커머스 가이드라인 마련	라이브커머스 가이드라인 이행여부 점검	라이브커머스 가이드라인 제도개선
	위치정보산업 규제 합리화	법개정 추진	(법개정시) 하위법령 개정	(법령 개정시) 법령준수 여부 점검 및 후속조치
		지원대상 확대 (50개사)	지원대상 확대 (60개사)	지원대상 확대 (70개사)
	안전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CI 활용현황 실태조사 및 CI 생성기술 보완방안 마련	CI 생성기술 보완 추진	CI 등 본인확인 관련 기술 고도화 추진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